

## 국민임대주택건설 반대 결의안

의안번호	198
------	-----

발의일자 : 2005. 12. 16

발 의 자 : 정쌍식의원의외5인

### 1. 主 文

별첨 “결의문(안)”과 같음

### 2. 提案理由

- 사하구 영구임대아파트 건립비율은 부산시 전체의 45%로 타지역에 비해 영세민 밀집도가 매우 높으며, 아울러 주택공사에서 계획중인 최소단위의 국민임대주택이 건립될 경우 부산시 전체의 과반수가 넘는 저소득 주민이 우리구로 밀집됨으로 인하여 도시개발 뿐만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에 심각한 지장 초래.
- 구 예산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예산은 36%로 2005년 대비 27.08%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영세민들의 증가 실정에서 국민임대주택 1,400세대가 추가 건립될 경우 타 구의 기초생활수급자 유입 등으로 사회복지예산의 수요가 급증하여 심각한 재정악화가 초래.

### 3. 보낼 곳

-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국회(건설교통위원장), 건설교통부(주택기획팀장, 주택건설팀장, 택지개발팀장), 부산광역시(건축주택담당관),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장, 사하구청장(기획감사실)

## 국민임대주택건설 반대 결의문

우리 사하구는 입지여건상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업지역 비율이 전체 도시구역 용도지역상 24%를 차지하는 공단과 주거지역이 혼합화된 기형화된 도시기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주거생활은 최악의 조건을 구비하여 소음, 악취 등 환경 문제로 인한 집단민원이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최근에는 부산광역시에서는 구민들의 계속된 항의와 민원제기로 인하여 「신평공단 지방산업단지」 일원에 대하여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물며 최근에 와서는 이와 같은 주변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구의 의견제시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신평동 산94-1번지 일원에 대한주택공사에서 국민임대주택건설을 계획하고 있어 우리 38만 구민의 정서를 외면하는 이러한 처사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공단인근에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은 악취소음의 반복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구 행정에 대한 불신은 물론 주민반감으로 이어져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란을 가져 올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사하구는 영구임대아파트 건설비율이 부산시 전체의 45%로 타 지역에 비해 저소득계층의 밀집도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철거민 집단이주지역과 생활이 어려운 영세서민 밀집지역이 많이 산재해 있어 도시기반시설과 생활환경 등 전분야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부산발전연구원의 설문조사결과 주민만족도가 최하위로 나타나 주민의 자긍심에 많은 상처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는 신평장림공단 및 하수처리장, 폐기물소각장 등 환경저해 업종 등 주민 기피시설이 산재해 있어 삶의 질 측면에서 지난 30여 년간 주민들은 고통과 불이익을 받아왔으며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여 있는 실정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의 개선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에서는 서부산지역을 동부산권에 버금가는 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산시의 정책을 무시하고 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 전립을 계속 추진할시 부산광역시 전체 과반수가 넘는 저소득 주민이 사하구로 밀집되어 도심의 주거환경은 물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구 예산중 사회복지예산이 전체예산의 36%를 차지하며 2006년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지원 등 2005년도 대비 27%나 증가하고 있어 국민임대주택 1,400세대가 추가 전립 될 경우 대규모 타구 저소득계층유입과 함께 사회복지비 증가로 심각한 재정악화를 초래될 것이 예상됩니다.

종합적으로 대한주택공사는 지역주민들의 수차례에 걸친 관계기관의 반대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국민임대주택계획을 백지화하고 철회하는 결단을 38만 구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5. 12. 16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 의원일동**